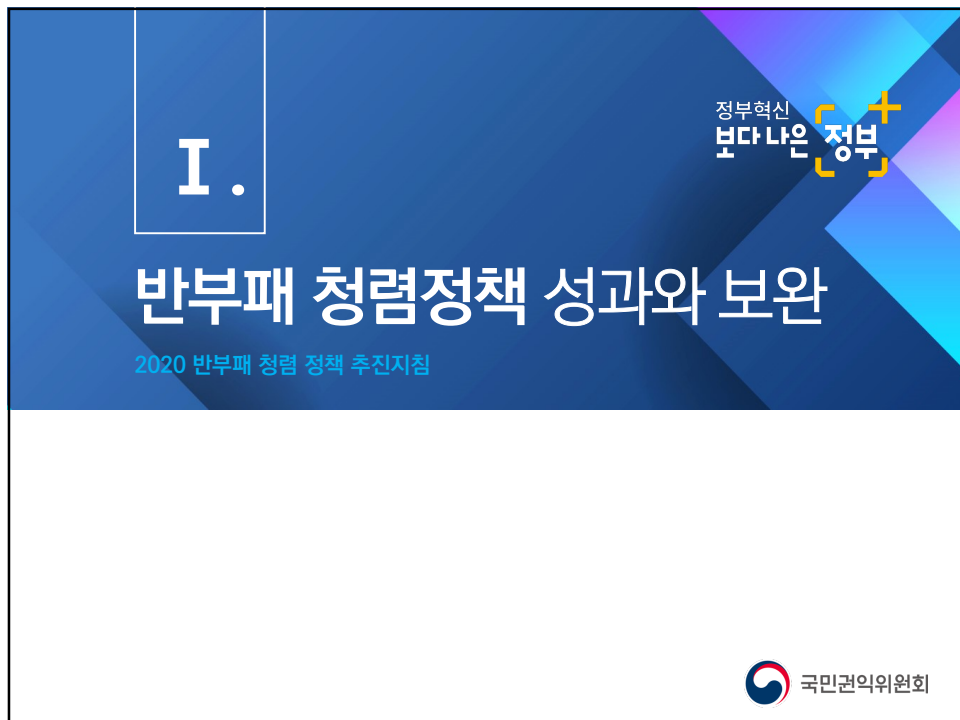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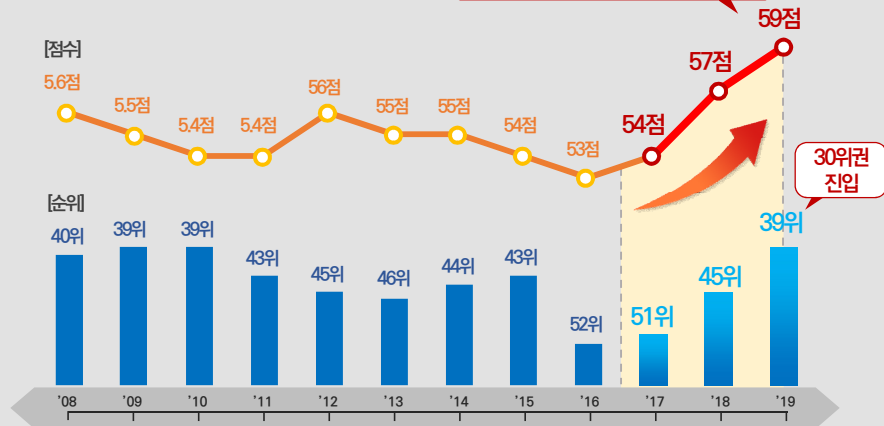


청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기틀 마련

국가별 부패인식지수 역대 최고점수 기록

✓ CPI 그래프 ['19년 부패인식지수(CPI)]

1년 만에 다시 역대 최고점수 기록



3

아시아 최고 청렴국가로 도약

아시아 최고 청렴국가로 도약

✓ 2019년 국가별 공공청렴지수 (IPI, Index of Public Integrity)

1위		뉴질랜드	9.60
2위		덴마크	9.60
3위		핀란드	9.40
⋮	⋮	⋮	⋮
10위		미국	8.95
19위		한국	8.34
20위		일본	8.30

세계 117개국 중

아시아 1위, 세계 19위

〈공공청렴지수 개요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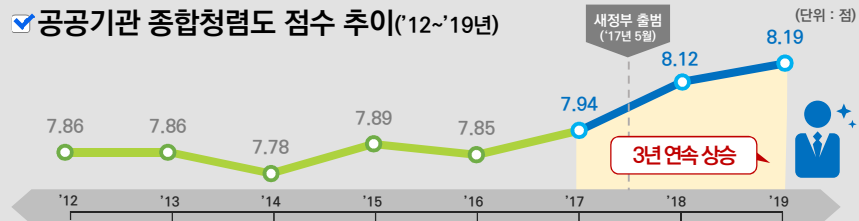
- 발표기관 :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(ERCAS)
- 발표배경 : 부패통제 현황·발전에 대한 명확한 평가
- 조사대상 : 117개국('19년) ※'15년부터 격년 발표
- 지수구성 : 사법부 독립성, 행정적 부담, 교역 개방성, 예산 투명성, 전자적 시민권, 언론의 자유 등 총 6개 지표

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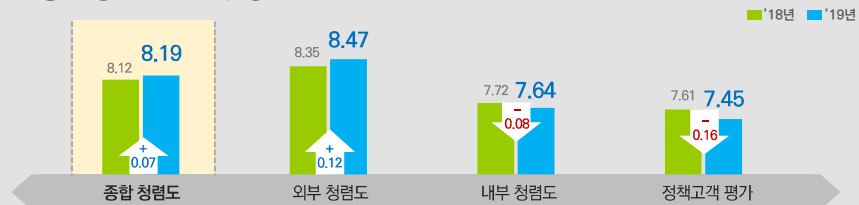
공공기관의 청렴수준 향상 (1)

공공기관 청렴 수준의 지속적 상승

☑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점수 추이('12~'19년)



☑ 종합청렴도 및 각 영역별 점수 비교('18년~'19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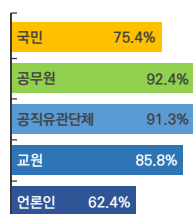
5

공공기관의 청렴수준 향상 (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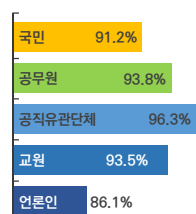
공공부문 공정성 제고를 위한 법·제도적 기반 강화

☑ [청탁금지법]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원·협찬('19.7.), 주차편의 제공('19.9.) 등 불공정 관행 실태조사 및 개선대책 통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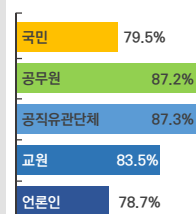
① 부조리·부패 문제 개선에 도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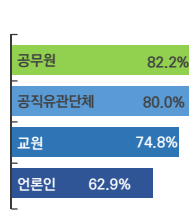
② 사회생활·업무 수행에 지장 없음



③ 관행적 부탁, 접대, 선물을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



④ 인맥을 통한 부탁·요청이 감소



☑ [공무원행동강령] 이해충돌방지, 갑질 금지 등 공직자 행위기준 강화

6

○ 국민 삶 속의 반부패 현안에 대한 **범정부 대응**

대응방안 1

범국가적 반부패·청렴 정책 추진체계 확립

- ✓ 대통령 주재 '반부패정책협의회' 복원·운영 (17.9.-)
※ 총 5회 개최로 전관특혜 근절 등 논의
- ✓ '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' 추진 (18.4.-)
※ 4대 전략·50대 과제 종합관리 추진

대응방안 2

생활적폐 대책협의회 지속 운영을 통한 반칙과 특권 해소

- ✓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직면하는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에 대한 제도·문화 및 행태의 종합개선 추진
- ※ 범정부 생활적폐대책협의회 구성(18.12월), 생애주기별 9개 과제 이행점검, 홍보(총 5회)

7

○ 국민 삶 속의 반부패 현안에 대한 **범정부 대응**

대응방안 3

학사유치원 등 교육 분야 공정성 강화

- ✓ (유치원 운영 공정성) 1,320개 사립유치원 EduFine 적용(19.3.), 유치원 3법 국회 통과(20.1.) 등
- ✓ (학사행정 부패 차단) 학생평가 비위 사립교원에 「교육공무원 징계양정기준」 적용 (「고등교육법」 개정, '19.4.) 등

대응방안 4

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조사대책 마련 및 민간 확산

- ✓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및 종합대책 발표(19.2월)
※ 채용비리 519건 적발 → 771명 수사의뢰·징계 요구 및 3,298명 채용기회 부여
- ✓ 채용절차법 개정·시행(19.7월, 고용부) 등 공정채용 원칙 민간 확산
※ 채용관련 청탁압력 강요 및 금품수수 등 금지,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·요구 행위 금지
→ 위반시 과태료(3천만원 / 500만원)

8

○ 국민 삶 속의 반부패 현안에 대한 **법정부 대응**

대응방안 5

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통한 국가재정 누수 방지

- ✓ (공공재정환수법)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와 제재에 관한 일반법 제정('20.1.1. 시행)
※ '19년 기준, 공공재정지급금 약 229조 추산
- ✓ (부정수급 점검) 부처별로 점검 TF 구성, 1,854억원 적발, 647억원 환수 결정('19.상반기)

대응방안 6

불법개설 의료기관 등 보험수급비리 근절

- ✓ 사무장병원 몰수 근거 마련, (「범죄수익은닉규제법」 개정, '19.4.), 무자격자 처벌강화 (「의료법」 개정, '19.8.) 등

대응방안 7

공공분야 갑질 근절 및 민간 확산

- ✓ 행동강령 갑질금지 규정 신설 ('18.12), 공공부문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배포('19.2.)
- ✓ '직장 괴롭힘 금지 3법' (근로기준법, 산업재해보상법, 산업안전보건법) 개정 시행('19.7.)

9

○ 부패·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**적극적 노력**

부패·공익신고 활성화

✓ 사학비리·부패,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취약 분야 신고 활성화 통해 부패행위 예방·제거

부패신고 접수

2018년		2019년	
처리 건수	7,224건	처리 건수	8,718건
이첩	306건	이첩	415건

공익신고 접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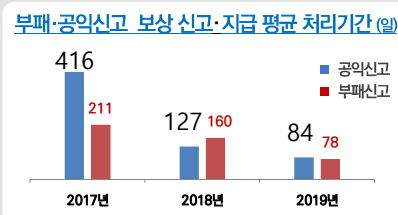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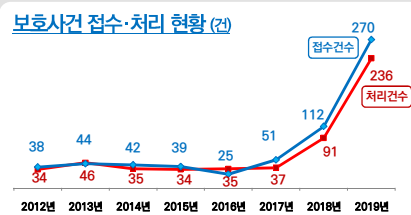
2018년		2019년	
처리 건수	3,953건	처리 건수	5,164건
이첩	37건	이첩	388건

10

부패·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노력

부패·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

- ✓ 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·제도 기반 강화
 - 부패신고자 보호·지원을 공익신고자 수준으로 강화('19.10.17. 시행)
 - 비실명대리신고 활성화를 위해 자문변호사단 구성('19.7.26.)
- ✓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신고자 보호·보상 실시
 - (보호) 역대 최대 보호사건(236건) 처리를 통해 신고자를 안정적으로 보호
 - (보상) 보상위원회 최대 개최(11회)를 통해 평균 처리기간 대폭 단축



11

반성 및 보완

2020년 신년사 中 대통령 강조사항

- ✓ '공정'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둘러싼 공기와도 같습니다. '공정'이 바탕에 있어야, '혁신'도 있고 '포용'도 있고 우리 경제사회가 숨 쉴 수 있습니다.
- ✓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하여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.

합법적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에 대한 대처 필요

- 합법적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반칙 관행 여전히 존재
-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논의의장 마련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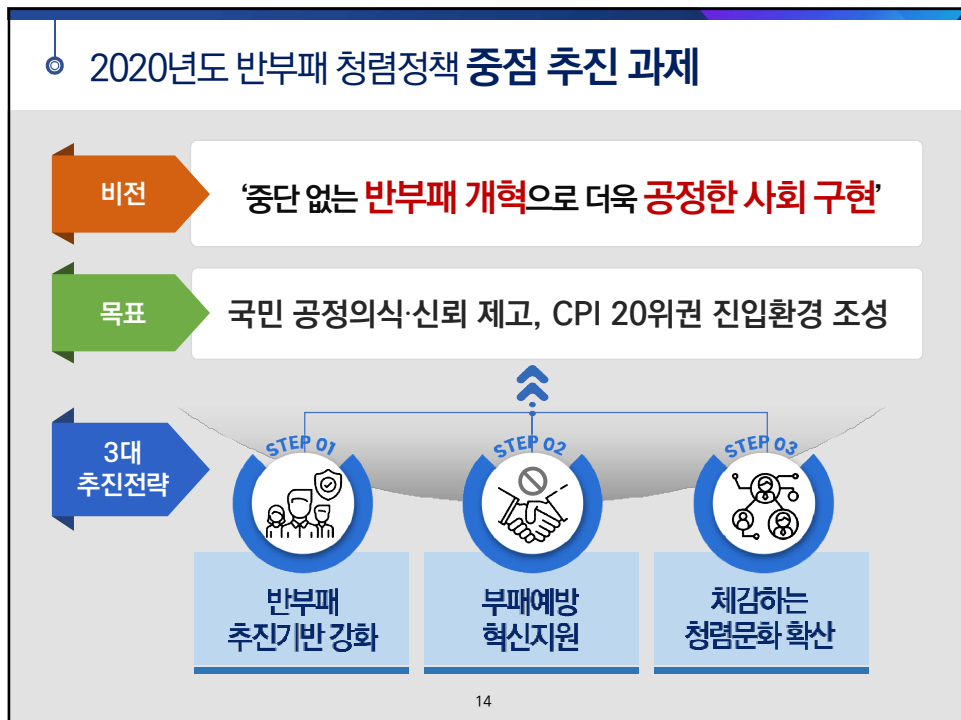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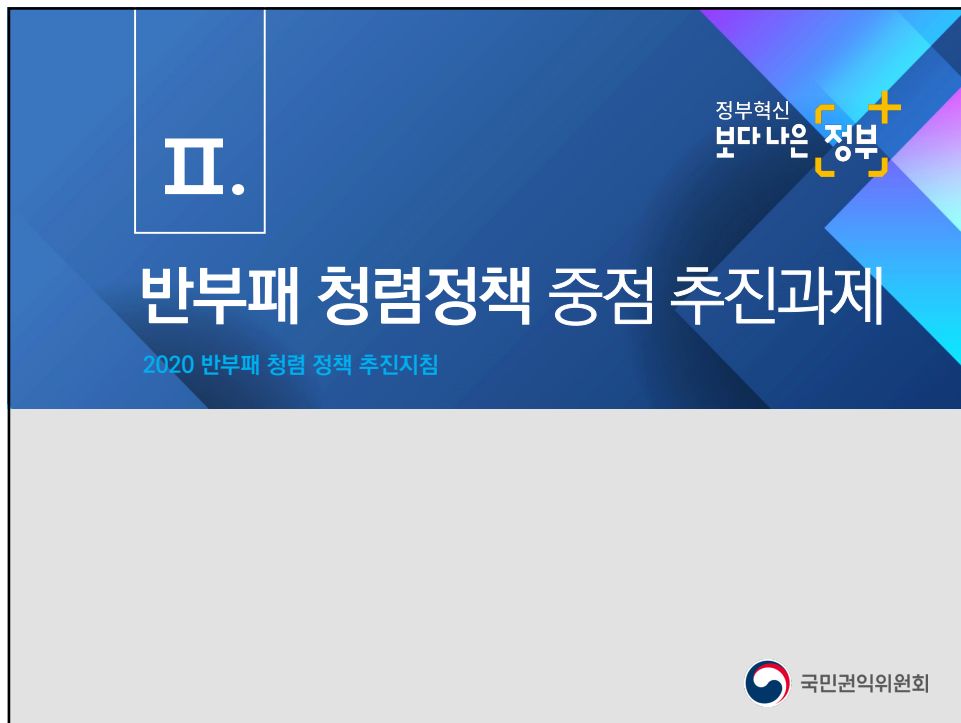
정부의 노력을 알리기 위한 전략적 접근 요구

-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는 아쉬운 수준
- 반부패개혁 성과가 민간부문으로 이어져 정부정책의 홍보확산

선택과 집중을 통한 신고제도 교육·홍보 필요

- 버닝썬, 언론에 의한 신고자 신분 노출 사건 등 신고제도 및 신고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환기
-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용한 신고가 많지 않음

12



1. 반부패 컨트롤타워로서의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기능 강화



대통령 강조사항

- ✓ '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'
(국회시정연설, '19.10.22.)
- ✓ '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로 확대·개편하는 것은 (중략) 우리 사회 전반에 공정의 가치를 뿌리내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각오를 분명히 하는 것'(제5차 협의회, '19.11.8.)



반부패정책협의회 확대·개편 운영

- ✓ (명칭) 반부패정책협의회 →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
- ✓ (의제) 부패방지대책 → 공정성 향상 대책 포괄
- ✓ (참석) 기존 12개 → 15개(기재부, 교육부, 고용부 추가)
- ➔ 「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규정」 개정
(대통령훈령 제414호, '20.1.14. 시행)

15

2. 부정청탁 근절을 위한 청탁금지법 규범력 강화



국민과 공직자의 인식 전환·확산

- ✓ 부정청탁 근절에 중점을 둔 교육·홍보 추진
 - (국민) '청탁금지법' 명칭, 법 주요내용 정확한 인식 제고
 - (공공기관) 전 공공기관 청탁방지 담당관, 언론사 중심 인식 확산
 - (취약분야) 채용비리 취약업역, 공공기관 민간협력회사 등 집중교육·홍보



법 집행력 확보 및 법령 보완

- ✓ 부정청탁과 직·간접적으로 연결된 관행 실태조사·보완대책 마련
- ✓ 실태조사 및 현지점검, 실제 위반 신고·조치내용의 공개 확대
- ✓ 공직자등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 신설
- ✓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운 사례를 대상 직무로 추가

16

3. 생활 속 반칙과 특권 해소를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 운영



범정부 협업을 통한 이행관리 및 대국민 소통 강화

- ✓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생활 속 반칙과 특권 근절 추진
 - ※ 주기적 이행점검(매월) 및 관계 부처 회의를 통한 개선성과 확산(매분기)
- ✓ 부처협업을 통한 전략적 홍보로 생활적폐 성과에 대한 체감 제고



기관별 자율 생활적폐 과제 발굴 개선

- ✓ 교육·탈세·직장·복지 등 생활 밀착 분야 신규과제 발굴 추진
 - ※ 민원정보분석, 국민생각함, 청렴 정책 국민 모니터단 등 다양한 창구 활용
- ✓ 지자체의 자체 생활적폐 개선 우수 사례 발굴 및 전국적 확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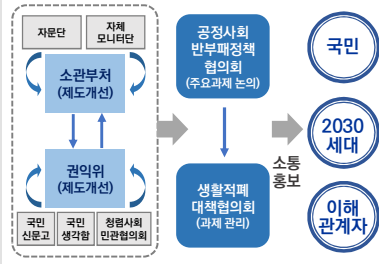
17

4. 국민 생활 속 불공정 과제 개선 추진



중점 혁신 분야 및 추진 체계

- ✓ (주요분야) 반칙과 불공정, 민관유착, 갑질, 재정누수 등



주요 과제

- ✓ (권익위) 신규 과제 발굴, 반부패 과제 개선, 과제 성과관리 및 홍보
- ✓ (소관 부처) 소관 업무 관련 생활 속 불공정 과제 발굴하여 자체 개선

연번	권익위 추진과제	부처별 과제(예시)
1	공공기관위탁운영 투명성 강화	스포츠계 공정경쟁시스템 정착 (문체부)
2	공공기관시설사용 투명성 강화	부동산 거래질서 공정화 (국토부)
3	공직자등 대상 알선배척 개선	공정한 금융 거래질서 확립(금융위)
4	임대주택 관리의 공정성 강화	연구개발비 집행 투명성 강화(교육부, 과기부, 국방부 등)

18

5. 공공기관 채용 공정성 강화



정기 전수조사 후속조치 및 대책 이행

- ✓ 정기 전수조사 결과, 적발된 비리 연루자 및 부정합격자 제재·퇴출, 피해자 구제 등 후속조치 추진
 - (비리연루자) 수사 의뢰 및 징계 대상으로 확정된 자는 즉시 업무 배제
 - (부정합격자) 검찰 기소 시 즉시 또는 일정 절차를 거쳐 퇴출 절차 착수
 - (피해자) 피해자 구제 세부가이드라인 (18.5월)에 따라 피해자 적극 구제



대책 이행을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민간확산

- ✓ (모니터링) 감독기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이행상황 주기적 모니터링, 이행미흡 기관에 대한 관리·감독 강화
 - (민간확산) 금융, 문화 예술, 체육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 우선 추진
 - 범금융권 공정채용 자율협약(2.20) 등 자율적 협력으로 공정채용대책 민간 확산

19

6. 행동강령 내재화 및 이행점검 강화



「공무원 행동강령」 내실화 및 제도 운영 지원

- ✓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 관련 행위 기준 개선
- ✓ 상담 및 질의 빈발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 마련
- ✓ 행동강령 미제정 지방의회 제정 유도
- ✓ 신규 공직유관단체 대상 행동강령 컨설팅 및 워크숍 등을 개최



취약분야 테마별 행동강령 이행점검 실시

- ✓ 현행 행동강령의 이해충돌 방지규정 (18.4월 시행) 운영 현황
- ✓ 공용물의 사적 사용, 업무추진비, 수용비, 여비 등 예산의 목적외 사용
- ✓ 설 추석 명절, 선거철, 휴가철 등 위반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시기

20

7. 평가·환류를 통한 자율적 개선노력 지원 확대



청렴도 측정의 신뢰성·타당성 제고

- ☑ (대상) 기관별 부패 현황 등을 고려, 대상기관 및 측정 업무 조정
- ☑ (모형) 측정 내용, 가중치, 부패사건 감점 제외 범위 등 모형 개선 검토
※ 전문가, 기관담당자 등 의견수렴
- ☑ (점검) 상·하반기(4~6월, 8~11월)에 나눠 시행 예정



부패방지 시책평가 내실화 및 활용도 개선

- ☑ 평가지표 체계 재설계로 공공기관의 부담 경감 및 실질적 성과 창출
- ☑ 우수기관 반부패 역량 확산 체계 구축
※ 우수기관 담당자 강사활용, 우수사례 보도 자료 배포, 동영상 제작·홍보, 민간 확산

21

8. 제도개선을 통한 부패예방 기능 강화



제도 속 내재된 불공정·특혜 개선

- ☑ 교육·채용 등 진입 자체를 차단하는 각종 기회장벽 제거
- ☑ 정보 불충분, 갑질 계약, 관리 부실 등 불공정 행태 및 사각지대 개선
- ☑ 기존 제도만으로는 해소할 수 없는 국민 삶 속 불공정의 실질적 개선



권고과제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및 이행효과 확산

- ☑ 이행 저조기관 맞춤형 이행관리 강화
※ 이행이 저조한 기초지자체, 국공립대학, 중·소규모 공직유관단체 중심
- ☑ 권고 이행을 일정수준 이하 기관, 신규지정 공직유관단체 개별 컨설팅
- ☑ 제도개선 효과 국민 체감을 위한 이행 성과 관리·확산
※ 카드뉴스·인포그래픽 등 활용

22

9.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활성화



공공기관 사규 일제 점검

- ✓ 공공기관 업무 유형별로 분류, 단계적으로 소관 규정 일제 정비
- ✓ 공직유관단체 대상 연차적 점검
※ 2020년도 점검 대상 기관 187개 (36개 공기업 및 151개 지방공사·공단)



취약·필요 분야 부패영향평가 강화, 이행점검 등

- ✓ 현행 법령 중 재정누수, 신고자 보호 등 취약분야 대상법률 발굴·개선
- ✓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대상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이행실태 점검
- ✓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부패영향평가 컨설팅 실시

23

10. 공직자·국민이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



공직자 청렴교육 내실화

- ✓ 신규자, 승진자, 부패취약분야 교육과정 운영
- ✓ 전문 교육과정 운영으로 실효적 교육 추진 지원
- ✓ 청렴교육 의무화에 따른 공공기관의 교육운영 실태 점검 실시



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홍보 및 참여 활성화

- ✓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콘텐츠 공모전 개최
※ 사연, 영상물, 웹툰, 랩(rap) 등
- ✓ 각급 공공기관 대상 포스터 배포, SNS 등을 활용 홍보



청렴·공정문화 확산 위한 '반부패 주간' 운영

- ✓ UN 세계 반부패의 날 (12월 9일) 전후 '반부패 주간' 운영
- ✓ 기념식, 문화캠프 등 다양한 문화행사, 홍보부스 설치, 특별이동신문고 운영 등

24

11. 반부패 민·관 거버넌스의 구체적 성과 확산



청렴·공정 사회를 위한 혁신 주도

- ✓ 청렴사회시민관협의회를 통한 공정 관련 정책의제 발굴·제안
 - ※ '공정', '정의' 등 청년세대 요구, 국민관심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, 해법을 제시
- ✓ 시도 청렴사회시민관협의회를 청렴문화 확산 거점으로 육성



청렴문화의 전방위적 확산

- ✓ 지역별·분야별 청렴사회협약 확산 및 차질 없는 후속조치 추진
- ✓ '1기관 1청렴실천 운동' 등 공공기관의 청렴행정·청렴경영 선도
- ✓ 맞춤형 교육, 워크숍 등 청렴시민 감사관의 전문성·청렴성 강화

25

12. 공공재정환수법의 안정적 시행을 통한 재정누수 방지



공공재정 부정수급 제재·환수 체계 운영

- ✓ '나랏돈의 공정 사용' 기준으로서 「공공재정환수법」시행(20.1.1.)
 - ※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를 통한 부정 청구 관행 근절 유도
- ✓ 적극적 홍보로 제도의 안착 및 공공재정에 대한 인식 변화 유도
 - ※ 수급자, 일반국민, 공직자 대상 맞춤형 홍보



실태점검을 통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취약분야 분석·개선

- ✓ 부정청구의 근거법률, 사업명, 소관기관, 부정청구 발생내역, 환수·제재 내역을 수집·관리
- ✓ 신고 빈발분야, 관리·감독 사각지대 대상 관계기관 합동 실태조사 실시
 - ※ '20년에는 연구개발 분야 등에 대해 집중 점검 예정

26

13. 부패·공익신고 사건처리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강화



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

- ✓ (집중신고기간 운영) 불공정한 불법적 반칙·특권행위를 집중 단속
- ✓ (제도홍보) 주요 신고사건 처리결과, 강화된 신고자 보호제도의 주요내용 및 보호 사례



이첩·송부 신고사건에 대한 사후관리 효율화

- ✓ (법적근거 강화) 시행령 상의 부패·공익침해행위 신고사건의 '관계기관 송부'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입법
- ✓ (점검 강화) 이첩·송부사건 조사 진행 현황 및 처리결과에 상세한 파악을 위해 관계기관 협업, 현장조사 강화

27

14. 신고자 보호·보상 강화로 사회 전반의 자정노력 촉진



공익신고자 보호 범위 및 지원 확대

- ✓ (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)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284개 → 468개로 확대하여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
- ✓ (책임감면 확대) 각 기관이 신고자에 대한 징계·행정처분을 자체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추진
- ✓ (재취업 지원)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부패·공익신고자의 재취업 지원방안 모색



비실명 대리신고제도 활성화(공익신고)

- ✓ (교육·홍보) 대국민·공공기관 등 대상 제도 교육·홍보 강화
- ✓ (협업) 자문변호사단, 대한변협, 지방변협과의 권역별 간담회 개최를 통한 제도교육, 의견수렴 등 협력 강화
- ✓ (제도개선) 비실명 대리신고 기관 확대,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범위 확대 검토

28

15. 적극적인 부패·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운영



보호제도의 적극운동을 통한 불이익 예방·관리

- ☑ (보호 강화) 조사중 해결, 우선적 인사조치, 화해 등 활용 가능한 법적 보호수단 활용
- ☑ (사후관리) 보호조치 이행, 추가 피해·불이익발생 여부 등에 대한 사후 점검·관리 강화



보상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신고자 만족도 제고

- ☑ (보상금 적기 지급) 법정처리기한 (90일) 내 처리 및 적절한 보상금 지급
 - ☑ (포상금 지급 확대) 부패·공익·청탁·부정청구 신고 등으로 인하여 공익 증진 기여자 대상 포상금 적극 지급
- ※ 「부패방지권익위법」 개정(19.10.17.시행) 및 「공공재정환수법」 제정(20.1.1.시행)에 따라 가능

29

16.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실효성 제고



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운영체계 재정비

- ☑ 비위면직자등 취업심사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사전심사제 도입
- ※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여부 사전 확인 의무화 등



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대상자 관리 강화

- ☑ (점검강화) 연금제한자 전수조화(최근 5년분), 범죄경력조회 등 분석으로 점검대상자 확인 강화(5~6월)
- ☑ (실효성 확보) 자료미제출 기관 퇴직자 중 취업제한제도 위반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실태점검 추진

30

17. 국가청렴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반부패 업무 혁신



범정부 통합 반부패 신고창구 「청렴포털」 본격 운영

- ✓ (창구 확대) 중앙·지방·공공기관에도 직접 부패·공익 신고를 할 수 있는 통합 신고창구인 청렴포털 개통(20.2월)

구분	기존	개선
간편신고	· 신고자가 소관법령에 따라 각 창구에 개별 신고	· 부패유형 구분 없이 하나의 창구에 신고
신고창구	· 권익위 · 각급기관개별창구 (메일, 온·오프라인 창구 등)	· 청렴포털로 일원화 ※ 개별운영 신고창구 연계
타기관신고 보호·보상	· 신고관련 정보 입력 필요	· 신고 관련 중복 정보 입력 없이 보호·보상 신청



반부패 정보 환류를 통한 반부패 업무 역량 강화

- ✓ (공직자) 각급 기관의 반부패 업무 처리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유·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

※ 맞춤형 지식서비스 제공 등

- ✓ (국민) 반부패 청렴정책·정보 공개로 누구나 손쉽게 비교·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

31

협조사항1 국제반부패회의(IACC) 개최 (1)

기본 방향

- ✓ 2020년 국제반부패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 분야 적극적 동참 도모
- ✓ 한국의 반부패 성과 홍보 및 글로벌 반부패 이슈 논의 촉발

〈회의 개요〉

- 회의명** ·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(IACC, International Anti-Corruption Conference)
- 기간/장소** · '20. 6. 2(화) ~ 6. 5(금) / 서울 코엑스
- 주최** · 국민권익위원회(대한민국 정부대표), 국제투명성기구(TI)
- 규모** · 정부·학계·민간·언론 등 140여 개국 1,500~2,000여명 참석
※ 회의 관례에 따라 개최식 환영사로 대통령 기조연설 추진
- 주제** · "Designing 2030: Truth, Trust and Transparency"
- 프로그램** · 본회의(개·폐회식, 전체세션, 워크숍)와 부대행사(반부패영화제콘서트 등)

32

협조사항1 국제반부패회의(IACC) 개최 (2)

세션구성 및 운영

- ✔ **(전체세션) 참석자 전원(약 2천명)이 참여하는 전체세션은 8개**
 - 세션별 주제에 맞춰 국내외 연사 섭외, 국내 연사를 통해 한국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
 - ※ 구체적인 세션 주제(안)은 자료 참고
- ✔ **(워크숍) 전 세계 공모 200여개 워크숍 중 약 50개 선정(150~200명 참여)**
 - ※ 한국의 시민사회, 학계, 공공기관에서 약 7개 내외의 워크숍 기획·운영 예정

부대행사 기획·추진

- ☑ (Films for Transparency) 내부고발자, 탐사보도기자 관련 다큐멘터리 상영 및 감독과의 대화
- ☑ (Fair Play Live Concert) '반부패, 청렴, 사회정의' 주제 전세계 밴드 콘서트
- ☑ (청년기자단) 회의취재와 연사인터뷰 및 SNS 등을 통해 전세계 실시간 소통
- ☑ (토코콘서트) 국민권익위의 청렴콘서트,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토코콘서트

33

협조사항1 국제반부패회의(IACC) 개최 (3)

참가자 등록 및 지원

- ☒ (등록) IACC 홈페이지(<https://iaccseries.org>) 온라인 등록 진행 중, 행사 중 현장 등록도 병행

구 분	조기 등록 ('19.12.20.~'20.4.30.)	직전 등록 ('20.5.1.~)
일반 요금	400 유로	500 유로
할인 요금 (NGO·학계 학생)	300 유로	350 유로
동반자 요금	200 유로	250 유로
일일 요금	150 유로	

- ▶ (참가자 지원) 분야별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지원
 - (비자·출입국) 법무부, 외교부
 - (관세·검역) 관세청, 농림축산검역본부, 질병관리본부
 - (공화 연승) 인천공항공사, 주한 대사관
 - (안전·교통) 경찰청, 서울시, 국토교통실 등

국내외 홍보

- ☑ (일반 홍보) 사전 준비단계: 홍보영상·포스터 제작 게시,
프로그램 기획단계: 보도자료 배포, 연사 초청단계: 반부패 전문가 인터뷰 등
☑ (현장 홍보) 행사장내 홍보부스, 체험관 등 운영

34

